

전남도-도교육청,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 갈등

심의위, 내년 식품비 지원안 의결
교육청 "30대70 분담률 수용불가"
도 "식재료 100% 도·시군이 부담"
인건비·운영비·조례 등도 입장차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또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5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학생 1인당 급식단가 400원(무상급식 200원·우수식재료 200원) 인상을 의결했다.

또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분담율도 전남도 47%, 전남교육청 53%로 확정해 2025년 학교급식 총 사업예산 1651억원(도와 시군 780억원·도교육청 871억원)을 의결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특수학교 통틀어 2199개교 21만 9000명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보다 400원 인상된 4613원으로, 전국에서 7번째 수준이다.

이같은 심의 결과를 두고 전남도는 "합리적 결정"으로 받아들인 반면 전남교육청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50대 50인 지자체와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율을 30대 70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분담금이 602억원에서 871억원으로 급증해 부담이 크다"며 우수 식재료 지원은 빼고 무상급식만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여기에 더해 인건비와 운영비도 50대 50으로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도는 "무상급식은 30%지만, 도와 시·군이 100% 지원하는 우수식재료를 더하면 분담률은 47%로, 전국 평균 48%에 가까운 수준이다"면서 "2022년부터 전체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되는 만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 분담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다.

전남교육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남 사례 등을 들어 "우수식재료와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별개"라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7개 시·도가 우수식재료를 100% 부담한 뒤 이를 무상급식 분담비에 반영(연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조례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현재 전남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등 2가지로, 전남도는 "공통목적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이고, 심의위원회도 통합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반면 전남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식재

료 지원 근거 조례가 각각 다른 것은 문제고, 두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이밖에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목적과 심의위원회 불공정 편성 여부 등을 두고도 서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

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 무상급식을 두고 두 기관의 갈등 재발을 우려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민주당·목포4) 의원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줄

어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놓고 두 기관이 대립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동구새마을회 온기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 김대영 광주시동구새마을회 회장과 박미숙 동구새마을부녀회 회장 등이 지난 22일 광주 동구 충장동마을사랑채에서 '온기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동구새마을협의회(회장 기영호)와 동구직공장협의회(회장 김길문), 동구새마을문고(회장 주정주) 회원 등이 김장김치 약800포기를 담아 행복한 동행의 실천을 위해 동구 관내 그룹홈 2개시설과 각동 200여 세대에 전달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비전 공유

광주시는 전남대학교병원,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22일 전남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지원센터에서 '광주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광주시의 규제자유특구 비전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기승정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이 '광주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소개한데 이어 윤택림 센터장이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동향', 박소라 원장이 '첨단재생의료 국내 활성화 방안', 김장호 (주)나노바이오시스템 대표가

'첨단재생의료 조직공학·융복합치료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에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사업'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사업을 보다 구체화한 특구 세부계획서를 기획 중이며, 중기부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께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광주시가 계획하는 첨단재생의료 특구는 광주 전역의 약 90만평 규모이며,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공공기관 대화 물의' 간부공무원 징계

전략추진단장 하향 전보 조치

광주시가 강기정 시장의 공공기관 순회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난 시청 간부공무원에 대해 징계성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현장대화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지난 22일 이를 총괄하는 부서인 전략추진단 A 단장의 책임을 물어 무보직 하향 전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임 단장에는 윤미라 서기관을 임명해 인적 쇄신과 함께 업무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신임 단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동행전략 등을 지속하고 각 부서 융합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1일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시장 의전이라는 꼬리가 직원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라는 몸통을 뒤흔들었다.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시장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든 일이다"고 개탄했다.

강 시장은 "변명할 힘으로 노력하자. 이번 일에 책임이 있는 직원뿐 아니라 저자

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며 "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오해를 유발한 일은 없었는지, 또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A 전 단장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현장대화에 앞서 해당 기관에 '(시장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적시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과도한 의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최권범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이제는 혼자서도 단단하게 떠나자
홀로당당
JIN AIR
문의/예약 : 1522-1901
무안-도쿄 진에어(JI) 정기편 취항 확정!
도쿄온천여행 2박 3일
1인기준 699,000~

*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팁(1인 ¥3,000), 매너팁,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